

##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 - 동시대 원인분석과 부산의 지역성 -

배석만\*\*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와 조선의 사회경제
- III. 동시대 전국적 인식
- IV. 부산의 지역성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글은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동시대의 관련 분석과 부산의 지역적 배경 요인들을 검토해 본 것이다. 3·1운동이 한창이던 이른 시점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3·1운동이 발발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기존 식민통치의 문제, 민족차별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동을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배자의 인식에는 사회적 차별은 있었으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다이쇼데모크라시를 주도한 민본주의자들조차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근대와 발전을 보고 있었다. 반면 3·1운동으로 폭발한 조선 사회는 정치 폭력, 사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dolbe68@naver.com](mailto:dolbe68@naver.com)

회 차별에 대하여 경제 수탈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차별만을 바라보는 식민지 지배자와 달리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의 ‘차별’과 ‘수탈’이라는 두 축은 이렇듯 운동이 진행되던 동 시기에 식민지 피지배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었다.

부산만이 갖는 특성은 압도적 규모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공간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주도성,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지역 보다 앞서는 식민지 근대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전자는 민족 차별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에 대한 조선인의 분노와 저항도 보다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자는 일제에 저항하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성장시켰다. 백산상회의 기업 활동과 3·1운동기에 이미 활발했던 노동자의 항일동맹파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제어: 3·1운동, 사회·경제적 배경, 수탈, 근대, 부산

## I. 머리말

본격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시발점으로 ‘민족운동의 호수(湖水)’로도 일컬어지는 3·1운동은 손병희(孫秉熙)의 천도교 등 일부 사이비종교의 선동에 우매한 조선 민중들이 넘어간 것으로 치부하려던 일제의 바람과 달리 삼시간에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일제가 거칠게 이식한 ‘식민지 근대’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 더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전쟁특수로 성장한 민족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3·1운동에 에너지를 주입했고, 조선 식민지화의 도구로 만들었던 철도는 운동의 빠른 확산에 기여했다. 이렇듯 축적된 독립 열망의 에너지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이용하여 독립 요구를 파리강화회의에 알리려고 만세운동을 기획한 민족부르주아지의 기대를 월등하게 넘어서는 거대한 저항이 되도록 하였다.

3·1운동을 기획한 민족운동가들도 놀라고, 일제가 식민통치의 근본 기초를 고민하게끔 만든 폭발력과 확장성은 어떤 구체적 배경에 근거한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동시대의 관련 분석과 더불어 부산만의 지역적 배경 요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사실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해방직후부터 정치·사회 각 계층이 다방면에서 관심을 가진 주제였고, 1960년대부터는 학계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계기로 출간된『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은 그 1차적 결과물이었다.<sup>1)</sup> 1970년대 이후에는 민족대표 등 운동 주도층에 대한 연구, 각 계급, 계층들의 물질 토대, 운동 참여 동기 등 계급론적 관점의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민중사관이 보다 뚜렷해지고, 지역 사례연구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3·1운동에서 민중의 역할에도 주목하게 되었다.<sup>2)</sup>

지역 사례연구는 1990년대 이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대체로는 전체 연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차별과 수탈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등 식민지 경제정책에 주목해 그 수탈성과 차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sup>4)</sup>

1) 동아일보사 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1969.

2) 지수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 김상환은 지역사례 연구의 한계도 지적했다. 즉 연구 성과를 추종하고 종합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과도한 애향심, 애교심이 빚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역사』 29, 2011).

4) 관련해서는 배석만, 『3.1운동 경제배경 서술의 변화과정 분석』, 『역사와 현실』 108, 2018 참조.

부산의 3·1운동 연구 역시 전국적 연구 경향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구포 등 지역 사례연구로 심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하여 활발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sup>5)</sup>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3·1운동 발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리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라는 돌발변수와의 관련성 속에서 조선의 사회·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하였다. 이어서 3장은 전국 단위에서 일반화 할 수 있는 공통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을 동시대 지배자의 인식과 피지배자의 인식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부산만이 가지는 지역적 요인으로 보다 강조할 수 있는 배경 요인들을 도출해 보려고 하였다.

## Ⅱ.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와 조선의 사회·경제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일본 제국 주의 경제권 전쟁특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이다. 경제호황의 혜택은 당연히 식민지 모국 일본이 가장 크게 입었으나, 식민지 조선도 소외되지 않았다. 3·1운동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경제호황의 정점에서 일어난 것이다. 호황은 정치적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소재이다. 따라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를 포함하여 좀 더 폭넓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

5) 부산지역 연구 현황과 관련해서는 박철규,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향도부산』 23, 2007, 387~389쪽 및 김상환, 앞의 논문, 328~329쪽 참조.

## 1. 전쟁특수에 의한 일본 경제의 변화

전쟁특수가 일본 경제를 변화시킨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일본 자본주의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제1차 세계대전이 일본 경제에 가장 빠르게 미친 영향은 수출 확대와 수입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호전, 국제적 선박부족에 따른 해운업 호황이었다. 우선 수출 확대는 주력 수출품인 생사와 면직물을 생산하는 섬유산업의 투자를 자극했다. 수입 감소는 중공업 성장을 낳았다. 전쟁전 주로 일본이 유럽에서 수입 하던 기계류 등 생산재의 수입이 끊기면서 대체재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운업의 호황은 중공업 성장을 조선업이 선도하도록 했고, 철강업의 연쇄적 성장을 가져왔다.

수출 확대가 자극한 경공업, 수입 감소가 강제하고, 해운업 호황이 유도한 중공업의 동시 성장이라는 그동안 일본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전쟁 특수는 기업의 투자확대, 임금상승, 내수소비시장 확대라는 호황 사이클을 형성하였다. 투자확대에 필요한 기업 자금 제공에 대해 금융권도 인색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고이윤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초과에 힘입은 국제수지 호전이 은행의 금고를 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전의 경기 호황은 과열 양상도 동반하였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 임금상승과 도시인구의 증가, 내수소비시장 확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의 속도를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통한 공급 확대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간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미일선철교환(美日船鐵交換)’이다. 당시 선박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에 필요한 철강재를 일본 철강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수요

6) 橋本寿郎, 『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学出版会, 1984. 大石嘉一郎 編, 『日本帝國主義史』2, 東京大学出版会, 1985. 武田晴人, 『景気循環と經濟政策』, 『日本經濟史』3(石井寛治·原朗·武田晴人 編), 東京大学出版会, 2002.

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관련 민간업계가 주도해 미국에서 부족한 철강을 수입하는 대신 이 철강으로 건조한 선박의 일부를 미국에 인도하는 이른바 철강과 선박의 물물교환이 성사된 것이 미일선철교환이었다.<sup>7)</sup>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식 투기, 토지 투기, 선물(先物)상품 투기 등 각 종 투기가 성행했다. 벼락부자를 의미하는 ‘나리킨(成金)’이라는 단어가 일본 사회 일반에 확산된 것도 이 시기이다.<sup>8)</sup>

전쟁특수와 투기가 벼락부자를 만들고 사람을 도시로 모이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물가고와 소득 격차 확대를 가져왔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했다.

특히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한 1918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특수를 기대한 유통업자와 미곡 상인들의 미곡 매점 같은 투기행위는 이미 1917년부터 쌀값 폭등을 유발했고, 이것은 전국적인 쌀폭동으로 비화하여 데라우치(寺內) 내각을 붕괴시켰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과열된 경기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봄부터는 이른바 ‘다이쇼 버블(大正 bubble)’로 불리는 경기과열이 재현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의 일본 경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물가상승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투기를 부르는 투기적 경기상승 국면의 정점이었다. 경기과열은 장기불황의 서막을 알리는 1920년 3월 도쿄 주식시장의 대폭락까지 지속되었다.

7) 직접적인 계기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주요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선업 붐이 일어난 이후 부족한 철강재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으나, 그것이 1917년 미국 참전으로 두절되자 고안해 낸 방법이었다.

8) 전쟁특수의 수혜를 입은 해운, 철강, 탄광회사 사장들을 후네나리킨(船成金), 데쓰나리킨(鉄成金), 단코나리킨(炭鉄成金)이라 불렀고, 이들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은 직공도 나리킨쑏코(成金職工)라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에 의한 일본 경제의 전체적 변화 메커니즘을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쟁특수에 의한 일본 경제의 변화구조



자료: 武田晴人, 「景気循環と経済政策」, 石井寛治·原朗·武田晴人 編, 『日本経済史』 3, 東京大学出版会, 2002, 4쪽에서 작성.

전쟁특수는 도시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일본의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식민지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막대한 잉여자본을 축적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자본수출지 중 한 곳으로 조선을 주목했다. 정부 자금은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관업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의 잉여자금은 조선에 대한 자회사 설립 또는 공장 건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가고와 빈부 격차 심화는 일본 사회의 갈등을 증폭하였다. 쌀폭동은 식민지 조선의 식량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보다 강화시켰고, 노동운동의 격화와 이로 인한 임금상승의 압력은 기업의 조선 진출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이었다.

## 2. 조선 경제에 미친 영향

### 1) 회사 설립 붐

표 1. 1910년대 회사 수의 추이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1921년
조선인 회사	27	34	39	40	39	36	37	39	63	99	123
일본인 회사	109	117	132	141	147	147	177	208	280	414	541
합작(조선·일본)	16	19	22	27	29	28	13	18	22	29	39
합작(일본·외국)	-	1	-	-	-	-	1	1	1	2	1
합작(일본·미국)	-	-	1	1	1	1	-	-	-	-	-
합작(외국)	-	-	-	-	-	-	-	-	-	-	1
합계	152	171	194	209	216	212	228	266	366	544	70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원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도판

주: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표 1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조선에 회사 설립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918년경부터 회사 설립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족별로 보면 약간 양상이 다른데, 일본인 회사의 경우 이미 1917년을 전후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선인 회사의 경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후부터였음이 확인된다. 이런 민족별 시기 차이는 전쟁특수에 따라 활발해진 일본 기업 및 일본인의 조선 진출이 회사 설립 붐의 1차적 원인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1918년 회사령을 개정하면서 궁극적으로 폐지를 고민하던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조선의 공업은 아직 부업적 가내공업의 영역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병합 이래 백방의 지도와 장려가 있었던 결과 해가 갈수록 민중의 자각을 촉진하여 조선인 중에도 소규모나마 공장공업



경영으로 이행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한편으로 제반 산업의 진흥, 교통운수기관의 정비에 수반하여 자금력과 경험이 있는 내지인의 이주가 증가하여 발전된 공업을 기획, 공장을 신설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구주전쟁 후 재계가 미증유의 호황을 나타내고, 그 자금의 잉여는 왕성하게 조선의 공업경영에 투자되어 1917년과 1918년도에 대규모 기업기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일반의 기업심(企業心)을 유발해서 조선의 공업은 갑작스럽게 면목을 일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sup>9)</sup>

한편 조선인의 기업 설립이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1919년부터 나타나는 것은 전쟁특수 혜택을 본토 일본인보다 뒤에 실감할 수 있었거나, 조선총독부와의 밀착이 상대적으로 덜 한 상황에서 회사령에 대한 ‘자기검열’ 때문으로 보인다.<sup>10)</sup> 회사령이 조선인 기업가의 기업설립을 제약했음은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당시 조선 경제계 거물이었던 한상룡(韓相龍)은 전 재산을 털어서 회사 설립을 추진하던 종로 시전상인 백윤수(白潤洙)가 회사령 때문에 고민했는데, 자기가 조선총독부와 연결시켜서 해결해주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사는 1916년 자본금 50만 엔의 대창무역주식회사(大昌貿易株式會社)였다. 후술하겠지만, 대창무역은 다른 조선인 무역회사들보다 매우 일찍 설립되어 온전한 전신평가를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축적했다.<sup>11)</sup>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는

9)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260~261쪽.

10) 고바야시의 연구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20년 회사령 폐지까지 실제 회사설립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와 밀착관계를 갖지 못한 조선인 기업가에게 회사령은 자기규제를 통해 회사 설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았다(小林英夫, 『朝鮮會社令研究-その実施狀況を中心に-』, 『駒沢大学経済学論集』第21卷 第3号, 1990, 268~269쪽).

11) 백윤수와 대창무역에 대해서는 배석만, 「일제시기 입전(立塵)상인 백씨 집안의 경제활동-대창무역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과정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3-3, 2016 참조.

일본 기업들의 조선 투자를 추동했고, 이는 회사령을 무력화하면서 조선인의 기업 설립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 설립 경향을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민족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조선인의 기업 설립은 상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sup>12)</sup>

표 2. 민족별 회사 설립 추이

일본인 회사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농업	18	17	22	24	37
상업	60	60	59	73	103
공업	20	39	59	98	114
임업	2	4	4	3	5
수산업	2	2	1	3	23
광산업	2	2	2	6	5
은행업 및 금융업	10	13	16	17	23
운수업	17	21	26	33	64
가스전기업	8	12	11	13	16
기타	8	7	8	10	24
조선인 회사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농업	1	1	1	4	4
상업	19	18	19	33	49
공업	4	6	8	13	18
임업	-	-	-	1	-
은행업 및 금융업	9	11	8	10	17
운수업	2	1	3	2	7
가스전기업	-	-	-	-	2
기타	1	-	-	-	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원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도판  
주: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12) 일본 소재 기업이 조선에 자회사나 자매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도 제조업 중심인 것은 비슷한 경향이다.

이 시기 조선에 진출한 주요 일본 대기업들이 세운 기업들은 미쓰비시제철(三菱製鐵) 겸이포제철소, 대일본제당이 평양에 건설한 조선제당, 왕자제지가 신의주에 세운 조선제지,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자본이 투자되어 부산에 건설된 조선방직, 일본경질도기가 역시 부산에 세운 조선경질도기, 오노다(小野田)시멘트의 평안남도 승호리 공장(뒤의 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 닛카제유(日華製油)가 목포에 건설한 조선제유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조선인들이 활발하게 설립한 상업 분야 기업들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역회사이다. 표 3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조선인이 설립한 무역회사를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에서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인 설립 무역회사

회사명	소재지	설립	자본금(천원)		대표	비고
			공칭	불입		
共益社(株)	경성	1914	1,000	437	朴承稷	조선, 일본 공동투자
朝鮮貿易(株)	경성	1914	100	75	趙秉澤	
大昌貿易(株)	경성	1916	500	500	白潤洙	
會寧貿易(株)	함북	1918	100	75	盧成龍	
泰成社(株)	함북	1918	200	5	洪疇運	
德興商店(合資)	함남	1919	110		鄭德鉉	정덕현은 대표사원 겸 최대주주
海東物産(株)	경성	1919	300	75	玄基奉	
日州商會(合資)	함남	1919	20		河野年	
共同貿易(株)	경성	1919	500	125	安永基	
南鮮貿易(株)	전남	1919	300	75	朴士胤	
大東商會(合資)	함남	1919	100		車性奎	차성규는 金在錫과 함께 대표사원 겸 최대주주

13) 개별 기업 정보는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참조.

新義州貿易(株)	평북	1919	500	125	多田榮吉	조선, 일본 공동투자
共進商會(株)	경성	1919	200	50	金弘植	
大同貿易(株)	경성	1919	500	125	金宗國	
東洋物産(株)	경성	1919	2,000	500	金潤冕	
白山貿易(株)	부산	1919	1,000	250	崔浚	

자료: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상업부본에서 작성

총 16개 무역회사가 확인되는데 이 중 11개사가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8개사가 경성에 소재하였다. 또한 자본금 100만 엔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무역회사가 3개사나 있었는데, 이는 전 산업을 망라해도 아주 드문 경우였다. 특히 당시 조선상계를 대표하는 경성 종로상가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김윤면(金潤冕)의 동양물산은 자본금이 200만 엔이었다.

전쟁특수에 힘입어 조선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설립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에 조선인들은 상업회사 주로 설립했다. 이는 공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광범위한 농민적 소상품 생산이 주도하는 당시 조선의 사회경제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특수에 따른 경기과열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편승하여 일본에서도 광범하게 나타났던 미곡, 섬유제품 등의 투기 현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 2) 조선인 상업회사들의 선물(先物) 투기

조선인 지주, 상인들도 전쟁특수로 이익을 보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 스스로가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물품 투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쌀 값 상승에 따른 조선인 지주의 이익은 비록 그것이 친일 여부와 대지주, 중소지주를 나누는 계급적 관점이 포함되었다 하

14)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88쪽.

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sup>15)</sup> 고부 김씨가 주도 하에 전국 대지주들의 투자로 3·1운동이 아직 한창 전개되고 있던 1919년 5월 설립된 경성방직이 공장건설자금으로 면제품의 선물 투기에 나섰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6)</sup>

상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상룡의 도움으로 조선총독부와 선이 닿아 육의전 전통상인에서 무역회사로 변신한 대창무역은 전쟁특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1916년 창립 후 1919년의 4기 영업기까지 평균 30% 이상이라는 고율의 주주배당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14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잉여금을 적립금 형태로 사내 유보했다.<sup>17)</sup> 아울러 공익사(共益社), 조선우선(朝鮮郵船), 후지(不二)광업과 함께 13만 엔에 달하는 전시이득세(戰時利得稅)를 분담했다. 전시이득세는 영국과의 군사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동아시아에 점재하는 독일의 군사기지를 점령한 일본이 전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918년 3월 공포한 ‘전시이득세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쟁 전 2년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그 12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 20%, 개인 15%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대창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전시경기 최대의 수혜자였다고 할 수 있다. 1918년 12월에는 대창무역 산하에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견직물과 마포(麻布)의 생산시설을 갖춘 직물가공부를 설립하여 직포의 생산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sup>18)</sup>

전시특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한상룡, 조선총독부와 긴

15) 小林英夫, 『会社令研究ノート』, 『海峽』第3号, 1975, 32쪽. 손정목, 『회사명연구』, 『한국사연구』 45, 1984, 111~112쪽. 전우용, 앞의 책, 2011, 380쪽.

16) 경성방직의 면제품 선물투기와 관련해서는 주의중, 『대군의 척후: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역사, 2008, 141~150쪽 참조.

17) 창립년도인 1916년 제1기 영업기에 이미 10%의 배당을 실현했고, 이후의 배당률은 1917년 50%, 1918년 10%, 1919년 60%였다.

18) 배석만, 앞의 논문, 124~125쪽.

밀한 관계를 형성한 대창무역, 일본 대자본과 합작한 공익사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1919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설립된 조선인 무역회사들 역시 수익 규모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전 시특수를 누렸던 것은 확실하다. 자본금 200만 엔의 동양물산 등, 조선인이 활발하게 무역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증거이며, 이 회사들의 경영과 관련되는 파편적 증거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오늘날 민족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위상을 구축한 백산무역의 경우 독립운동을 하던 안희제(安熙濟)가 전쟁이 시작된 1914년 본인 소유의 토지 재산을 정리한 자금으로 부산에서 시작한 조그만 개인 상회였다. 그런데 백산상회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불과 3년 만인 1917년에 자본금 13만 엔의 합자회사가 되었고, 다시 2년이 지난 1919년에는 자본금 100만 엔의 무역회사로 급성장하였다. 백산무역의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영남 지역 대지주와 상인들의 투자와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있었다. 백산무역의 사장은 당시 조선 최대 지주였던 ‘경주 최부자’ 최준(崔浚)이었다. 이렇듯 1910년대 후반 조선인 무역회사의 활발한 설립에서는 전쟁특수와 조선 경제, 그리고 조선인 지주와 상인 등 경제인의 연결되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액의 잉여금을 사내 유보자금으로 축적을 하면서도 60%의 주주배당을 할 수 있는 전쟁특수기 대창무역의 경영을 조선총독부와의 밀착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도 정상적인 경영은 아니다. 백산무역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상회가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자본금 100만 엔의 무역회사가 되고 조선을 대표하는 대지주가 사장이 되어 경영을 맡게 된 것을 민족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정책, 친일,

19) 표 3의 무역회사들 중 대창무역과 공익사를 제외하고 정보가 확인되는 모든 회사들도 1919년까지 고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회령무역은 1918년 13%의 주주배당, 공동무역 1919년 10% 주주배당, 신의주무역 1919년 10% 주주배당을 실현하였다(『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참조).

민족과 별도로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1910년대 후반 조선인 지주와 상인의 자본축적과 여기에 힘입은 무역회사 설립 붐이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와 이것이 촉발한 물자부족과 가격폭등, 투기라는 식민지 모국 일본 경제와 동일한 시스템의 작동에 기인했다는 것은 1920년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후 불황 도래’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표 4는 전후 불황이 시작된 1920년 무렵 조선인 무역회사들의 경영성적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전후 불황기 조선인 설립 무역회사 경영 실태

회사명	영업기	손익	주주배당
共益社(株)	1920년	-824,000	무배당
朝鮮貿易(株)	1920년	-45,216	무배당
大昌貿易(株)	1920년	-126,335	무배당
會寧貿易(株)	1921년 상반기	3,316	10%
泰成社(株)		손실	무배당
德興商店(合資)	정보없음		
海東物産(株)	1920년	-124,622	
日州商會(合資)			무배당
共同貿易(株)	1920년	-47,929	무배당
南鮮貿易(株)	정보없음		
大東商會(合資)	정보없음		
新義州貿易(株)	1920년 하반기	152	무배당
共進商會(株)	1920년	-10,557	무배당
大同貿易(株)	1920년	-61,708	무배당
東洋物産(株)	1920년	-287,497	무배당
白山貿易(株)	1920년7월-1921년6월	-93,781	무배당

자료: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상업부분에서 작성

주: 공익사의 손익은 『동아일보』 1921.3.18.에 의거함

1920년 모든 무역회사는 마치 3·1운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듯이 영업 손실과 함께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짧게는 몇 달 전의 호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주목되는 것은 손실의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공익사의 경우 무려 82만 엔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동양물산 28만7,000엔, 대창무역 12만6,000엔, 해동물산 12만4,000엔, 백산무역도 10만 엔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공익사는 막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금을 기존 200만 엔에서 100만 엔으로 감자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지점을 출장소로 변경하는 조직 축소도 단행했다. 손실금은 전쟁특수의 시기에 축적해 놓은 사내 유보자금 중 37만 엔, 그리고 감자를 통한 43만7,000엔의 계감(計減), 나머지 1만7,000여 엔은 결손이월로 처리했다.<sup>20)</sup>

대창무역 역시 공익사와 비슷한 손실처리를 진행했다. 12만6,335엔의 당기손실금 처분은 전기이월금 1만518엔과 그간의 호황기 이익금을 사내 유보자금으로 적립한 14만 엔 중 12만 엔을 염출하여 해결하고, 손실처리 후 남은 잔액 4,183엔은 후기이월금으로 정리하였다. 대창무역 창립 후 전쟁경기에 힘입어 쌓아 놓은 자금이 1920년 한 해 동안의 영업 손실로 대부분 날아가는 순간이었다.<sup>21)</sup>

백산무역의 경우 10만 엔에 가까운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때를 시작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진과 주주간의 내분까지 발생하였다. 1924년 촉발된 최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대립은 당시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큰 사건이었다.<sup>22)</sup> 백산무역은 이런 상황에서

20) 『동아일보』 1921.3.18.

21) 배석만, 앞의 논문, 126쪽.

22) 관련한 신문지상 보도는 『동아일보』 1924.6.8; 6.25; 9.14; 1925.9.7; 9.20; 9.23; 10.5; 10.22, 『매일신보』 1923.9.23; 10.8 등 참조. 관련 분석 논문은 오미일, 『근대 한국의



도 독립운동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었다.<sup>23)</sup> 그러다 보니 자금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 이루어진 일제 경찰의 감시와 탄압은 영업을 한층 위축시켰을 것이다.<sup>24)</sup> 최준이 사장에게서 물러나고 창업자 안희제가 경영권을 다시 장악했지만,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27년 회사가 해산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전후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규모의 손실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은 선물 투기 때문이었다. 특히 1920년 대창무역, 동양물산 등 경성 소재 조선인 무역회사의 대규모 손실은 중국산 마포의 선물 거래가 원인이었음이 확인된다.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포는 속춘 재계의 變調를 예상치 못하였을 시에 경성내의 각 포목무역업자가 다수의 선물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총액이 대략 800만 엔에 달하였다. 그 후 현품이 도착할 시기에 錢荒이 일어나고 마포시세 또한 폭락하여 조선 상인은 그 결제자금에 곤궁할 뿐만 아니라, 설혹 자금이 풍족하여 현품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계약 당시에 비하여 거의 4할이 폭락하여 손해가 거대하므로 경성 조선인 직물상은 동맹회를 조직하여 그 선후책을 강구...”<sup>25)</sup>

위의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의 조선인 무역회사들과 포목상이 중국산 마포 선물 투기에 참여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보았음을 명확히 지적

자본가들: 민영회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312쪽 및 권대웅, 「경주 부호 崔浚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2013, 290~299쪽 참조

23) 백산무역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은 이동언의 기술(『안희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63~65쪽)에 따르면 100만 엔이 넘는 거액이었다.

24)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조기준(『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3, 제12장 참조)에 의해 언급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5) 『동아일보』 1920.6.18.

하고 있다. 마포 선물 투기로 인해 조선인 무역회사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도 확인된다. 분쟁의 내용은 대창무역을 통해 중국산 마포 선물거래계약을 했던 상회사들이 마포가격이 폭락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마포 인수를 미루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대창무역과 당사자들 간의 내부 협의가 결렬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동양물산과 동일상회(東一商會), 상신상회(相信商會) 등이 당사자들이었다. 특히 공익사를 제외하면 1920년 선물 투기로 가장 큰 손해를 본 대창무역과 동양물산의 분쟁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1925년에 가서야 일단락되었다. 두 회사의 분쟁은 이들이 종로 상권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경쟁자였다는 측면에서 경쟁 상계의 화제 거리이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동양물산은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소송비를 포함해 거액을 대창무역에 배상하게 되었다. 다행히 주거래은행인 조선상업은행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폐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sup>26)</sup>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는 일본 경제를 변화시켰고, 연동된 조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거대한 이윤을 축적한 일본 기업들이 잉여 자본의 투자처로 조선에 주목·진출하면서 회사령을 무력화했고, 조선 내에서도 활발한 회사설립이 이루어졌다. 조선인들도 적극적으로 회사설립에 나섰다. 전쟁특수에 따른 쌀값 급등의 혜택을 입은 지주층과, 면제품, 마포 등의 선물 거래를 통해 큰 이윤을 얻은 상인들이 주도하였다.

전쟁특수는 조선인 지주와 상인 등 부르주아지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일부 일본의 정치사회세력이 3·1운동의 원인으로 인정한 이른바 ‘무단통치’에 의한 거친 억압과 차별은 조선인 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도 성장시켰을 것이다. 1918년 ‘민족기업 설립’이라는 김성수의 뜻에 호응하여 전국의 지주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이미 독립운동가였던 안희

26) 배석만, 앞의 논문, 128~129쪽.

제가 설립한 백산상회의 급성장,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자본금 100만 엔의 백산무역 사장이 영남을 대표하는 대지주이자 경성방직에도 출자한 최준이었다는 점 등은 전쟁특수로 성장하고 민족주의로 무장하는 1910년대 조선인 부르주아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가 3·1운동의 주모자로 보았던 손병희가 최준, 김성수와 친밀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전쟁특수는 조선인 프롤레타리아의 저항도 성장시켰다. 일제가 전개한 ‘식민지 근대’로의 강제적 이행이 만들어 낸 차별과 수탈, ‘구관미신(舊慣迷信)’으로 칭하며 파괴한 전통적 사회·문화질서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누적된 일상적 분노에 더하여 전쟁특수에 따른 쌀과 면제품 등 생활과 관련된 물품의 가격 폭등은 현실적 불만을 고조시켰고 3·1운동의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에서 전쟁특수의 혜택은 조선인 지주, 상인에게는 주어졌지만,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은 소외되었다. 이 시기 실질 임금은 높아지기는커녕 1910년대 초보다 하락했다. 연중 노동시간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910년대 노동자의 경제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물론 명목임금은 올랐다. 그러나 전쟁특수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는 명목임금의 상승을 상쇄한 것을 넘어서 실질임금을 줄였다. 농민의 경우 자작농의 호수와 그 비중을 볼 때 19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18년 약간 상승하지만 농가경제가 전쟁특수의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다.<sup>27)</sup> 결국 조선인 내부에서도 전쟁특수는 부의 격차를 키웠으며, 폭등하는 생활 물가는 식민통치에 대한 기층민의 분노를 가중시켰을 것이다.<sup>28)</sup>

27) 박섭,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한국경제-기업설립 붐, 생활수준, 산업정책』, 『현대사광장』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78, 80~81쪽.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는 조선 경제를 크게 변화시켰고 동시에 조선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저항도 촉진하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 Ⅲ. 동시대 전국적 인식

#### 1. 통치과오와 민족차별

일제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천도교 손병희 일파 등 일부 사이비종교가 조선인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단순한 소요 또는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도 운동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일본 사회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관련하여 언론, 야당정치세력, 지식인층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4월 11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조간 2면에 ‘조선폭동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꽤 긴 분석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는 3·1운동 발발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원인을 ①군인총독(무관총독)의 위압 통치, ②헌병제도의 폐해, 특히 조선인 보조헌병 문제, ③관리임용에서의 민족차별, ④재조 일본인들의 조선인 멸시라는 4가지 정도로 정리했다.<sup>29)</sup> 요약하면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강압과 폭력, 차별이 3·1운동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관총독제’를 채용하여 식민지 인심을 완화하고, 헌병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하며, 특히 조선인들

28) 미가 폭동에 따른 조선 기층민의 불만과 저항에 대해서는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참조.

29) 조선인들이 제공한 원인으로는 중국 상하이 등 재외조선인들의 배일선동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보조헌병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관리 임용에서 조선인에게 기회를 주고, 재조일본인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조선이 삼천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충분히 그 역사를 존중하고 일본의 부속지와 같은 관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보다 앞선 3월말에는 당시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과 경쟁하는 유력 야당 헌정회(憲政會)가 소속 중의원 모리야 고노스케(守屋此助)를 ‘조선소요조사특과원’으로 조선에 파견하였다.<sup>30)</sup> 그는 부산으로 들어와 조선인 통역을 대동하고 철도를 이용하여<sup>31)</sup> 전국 각지를 돌며 체포된 조선인을 취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0일간 3·1운동의 원인을 조사하고 4월 중순 일본에 돌아가 헌정회에 보고하였다.

모리야는 조선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大阪) 등에서 몇몇 언론과 접촉하여 조사 결과를 언급하였다. 기사화된 내용은 신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정리하면 ①언론 억압, ②번잡한 정치, ③민족차별, ④교육방법의 오류, ⑤민족자결주의 전파, ⑥천도교와 기독교의 선동 등이었다.<sup>32)</sup>

4월 18일 모리야의 조사보고를 받은 헌정회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들어 조선소요사건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sup>33)</sup> 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주사(主査)로 임명되어 대책안 기안을 담당하게 된 중의원 아마지 조이치(山道襄一)가 3·1운동의 원인을

30) 국민당도 4월말 시찰 파견을 결정하였다. 『謄売新聞』 1919.4.29

31) 시작은 마산선을 타고 각 역에 내려 상황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럴 경우 마산-삼랑진 간의 경남 지역을 우선 조사한 것이 된다.

32) 『大阪新報』 1919.4.17. 『謄売新聞』 1919.4.18. 『毎日新聞』, 1919.4.18.

33) 『謄売新聞』 1919.4.19.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내놓았다. 우선 총괄적 원인으로 조선독립사상의 확산(彌漫)을 들었다. 그리고 부분적 원인은 4가지로 정리했는데, ①서북조선인의 확대, ②선교사 학교의 폐해, ③세계적 시국의 영향, ④총독정치의 과오였다. 총독정치의 과오는 세부 항목을 달았는데, 법령 남발의 악폐, 헌병행정의 폐해, 관리의 아첨(上司迎合), 선교사 감독 태만, 구관미신(舊慣迷信)의 무시, 교육방침의 불철저, 언어보급방법의 모순, 재조일본인 푸대접(冷遇), 과도한 선인애무(鮮人愛撫)였다.<sup>34)</sup>

이 외에도 당시 3·1운동을 바라보는 일본내 여론은 정계, 군, 언론, 지식인층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축적되었고, 비례하여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거론하는 내적 요인의 공통분모를 모아보면 최소한 두 가지 요인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간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통치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조일본인을 포함하는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때문에 필요 이상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요인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3·1운동이 한창이던 4월의 시점에 형성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식민통치의 경우 군인총독과 헌병경찰제에 의한 강압과 폭력, 그리고 조선의 전통적 관습과 인식을 무시한 법률과 제도의 부식-이들은 이것을 과도한 인정(仁政), 선인애무로 표현했다-, 언어, 역사 교육과 같은 무리한 동화정책을 과오로 지적했다.

민족차별은 주로 조선인 엘리트층이 느껴야 하는 차별인식에 주목했다. 조선에 건너가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온 모리야는 운동에 조선인 지

34) 『大阪毎日新聞』 1919.4.24. 헌정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4월 29일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식민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은 학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 비해 뚜렷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5)</sup>

3·1운동이 발발하자 일본의 여론은 손병희와 같은 일부 사이비교주와 종교단체의 선동에 어리석은 조선인들이 속아서 일으킨 ‘단발적 소요’로 보았다. 그러나 운동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본격적인 원인 분석을 시작하였고, 식민통치의 문제와 조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민족차별을 원인으로 보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인 민족운동가들에게는 이른바 ‘무단통치’로 표현되는 거친 통치술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억압과 폭력, 그리고 민족문제로 표출된 사회적 차별은 당연한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조선인 전체에 공유되면서 3·1운동의 지속성과 확산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일제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이 3·1운동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은 다양한 정치·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 독립요구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은 2.8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이다(밑줄은 필자 강조).

“합병 이래 일본의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여 吾族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신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私權까지도 침해하며 공사간에 吾人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設하며 오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施하여서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사용자로 成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오족의 신성

35) 『讀売新聞』 1919.4.18.

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浚侮하며 소수를 除한 외에는 정부 제기관과 교통, 통신, 兵備 등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해야 오죽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不得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武斷專制 不正,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과를 향유키 불능한지라.”<sup>36)</sup>

1920년 발간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박은식도 관리임용에서의 민족차별에 주목했다. 그는 ‘순종하는 노예적 자질이 있는 자들’, ‘일본에 귀화한 자’ 조차도 하급관료였고,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 자산가의 사유재산을 감시하고, 자금운용은 예금인출은 물론, 기부, 의연금, 여행비조차도 통제하고 제약을 가했다고도 하였다. 조선인 상층부는 물론 친일협력자에 이르기까지 전민족적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sup>37)</sup>

이렇게 보면 3·1운동이 한창이던 이른 시점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기존 식민통치의 문제, 민족차별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그 대책으로 지배자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피지배자는 다양한 방법의 민족운동을 모색하게 된다.

## 2. 경제적 수탈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일제에 의한 수탈이 동시대 중심적 화두였다. 이 점은 각종 독립선언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선언서의 특성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논리는 일제가

3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8, 2009, 176~177쪽 (독립기념관홈페이지 <http://www.i815.or.kr/kr> 검색일: 2019. 2. 18.)

37) 배석만, 앞의 논문, 2018, 147~148쪽 참조.



조선 경제를 농락, 성장을 방해하고 압박했으며, 산업을 빼앗고 부를 착취하여 일본으로 가져감으로써 조선은 궁핍, 파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척식과 금융조합 같은 척식기관 설립과 일본인 농업이민을 통한 토지, 가옥 수탈, 상공업자의 성장 억제, 과중한 세금 등이다.<sup>38)</sup>

박은식 역시 경제적 수탈 설명에 적극적이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그는 척식기관에 의한 토지 수탈은 국유지로서 역토, 둔전, 궁토가 동척으로 넘어가 이주해온 일본인에게 경작되고, 그 결과로 조선인 소작인은 소작권을 빼앗기고 만주, 노령 등 해외로 유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해도 재령군 남호리 궁토에 대해 간략하게 다룬 한편, 만주에서 일본인이 척식의 이름으로 벌인 동척에 의한 토지 수탈과 일본인 농업이민을 길게 언급했다. 상공업 억압과 관련해서도 회사령에 주목했다. 아편 재배 장려와 그 수확물의 몰수라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조선 농민이 파산하고, 매춘 풍속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예측이 파괴되고 인명에 해독을 끼쳤다고도 했다.<sup>39)</sup>

3·1운동 주도세력이 주장한 경제적 수탈은 식민통치의 정책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주지하듯이 이 후 장기간에 걸쳐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해졌다.

반면 3·1운동을 바라보는 일본내 여론은 경제적 수탈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입헌정우회 하라내각에 대한 비판이라는 정치적 도구로 3·1을 이용하려고 했던 헌정회조차도 경제적 수탈과 관련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로서는 ‘수탈의 침병’으로 볼 수 있는 재조일본인들을 역으로 본토 일본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을 식민통치의 과오 중 하나로 보았다.

38) 배석만, 앞의 논문, 146~147쪽.

39) 배석만, 앞의 논문, 148쪽.

이런 점은 ‘다이쇼데모크라시’라고 불린 일본의 민주주의 개혁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도 큰 차이가 없었다. 3·1운동의 대책으로 일제가 고민한 식민통치의 변화모습, 이른바 문화통치의 산물 중 하나인 『동아일보』는 창간과 함께 ‘조선 소요에 대한 일본 여론을 비평함’이라는 제목 하에 10회에 걸친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동아일보 설립 주도자 중 한 명인 장덕준(張德俊)<sup>40</sup>이 교토제국대학 교수 스에히로 시게오(末廣重雄)의 조선자치론과, 역시 같은 대학 교수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의 ‘일시동인론(一視同仁論)’을 소개하고 비평한 것이다. 이 중 스에히로는 조선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자유를 박탈한 식민통치의 폭력성과 무리한 동화정책의 추진이 3·1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대책으로 조선의 자치권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래에는 조선인들이 독립을 원하고, 일본도 조선이 독립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역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양책이자 국운의 발전,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장덕준은 이러한 스에히로에 대해 ‘識量의 비범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sup>41</sup> 그러나 스에히로도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으로 수탈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발달과 진보,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식민통치의 유일한 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식민지 조선의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는 이를 ‘지난 10년간의 위대한 진보’라고 하였다. 장덕준은 관련한 스에히로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밑줄 강조는 필자).

“물론 병합이래 일본의 조선통치는 일면으로는 頗히 양호한 성적

40) 장덕준에 대해서는 최상원, 한혜경, 『일제강점기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에 걸친 기자 장덕준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30, 2012 참조.

41) 『동아일보』 1920.4.6.

을 擧하였도다. 종래부터 부패하였던 사법과 행정은 대부분 쇠신되었으며 교육기관은 충실되고 교통기관은 개선되었으며 위생도 보급되고 농상공업도 점차 발달하는 터이로다. 환언하면 조선은 일본통치에 의하여 茲今 10년간에 위대한 진보를 遂하였도다. 論하고 조선총독부 식림장려에 의하여 산색이 일변하였다는 예를 擧한 후 論을 更進하여 말하기를 ...”<sup>42)</sup>

장덕준도 스에히로의 조선 경제에 대한 식민통치의 공헌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평을 하고 있지 않다.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차별’과 ‘수탈’의 두 축은 이렇듯 운동이 진행되던 동 시기에 피지배자에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었다. 반면 운동을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배자의 인식에는 사회적 차별은 있었으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다이쇼데모크라시의 민본주의자들조차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근대와 발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유학시절 이들의 영향을 받았고, 귀국해서는 동아일보 창간을 주도한 우파 민족주의자 장덕준이 스에히로의 조선 경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 IV. 부산의 지역성

부산은 일제가 가장 먼저 침략한 지역이자, 식민지 경영의 교두보였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보편적 시각, 즉 앞서 소개한 민본주의자 스에히로의 말을 빌린다면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가장 먼저 시

42) 『동아일보』 1920.4.2.

작된 곳이기도 했다.

일제시기 조선에 들어오는 물자들의 가장 많은 양이 부산항을 통했고, 경인공업지대와 함께 양대 공업지대를 형성하였다. 1945년 패전으로 철수하는 일본인이 부산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느꼈듯이, 이곳은 식민지 땅이지만 일본인이 ‘본토’와 같이 느끼는 곳이기도 했다. 결국 부산의 지역성이란 사실상 일본인이 만든 근대도시로 어느 지역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주도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일 것이다. 일본인이 개발한 부산과 우리 전통 주거지 동래의 긴장감은 서울 종로와 진고개의 주도권 경쟁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식민통치의 공적이라고 인식한 근대와 경제발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주도성이 특별히 높다는 것은 수탈과 차별 역시 비례하여 높았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일본인의 침투로 조선인이 주변부로 물러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주변부로 편입된 곳이 부산이었다. 부산지역의 수탈과 차별 강도가 높았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사회경제적 저항이 격렬하게 표출되었음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의 토지 수탈<sup>43)</sup>,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의 여장 수탈<sup>44)</sup>, 그리고 동맹인부 파업(1907년)<sup>45)</sup>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수탈 등 다방면으로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이들 연구를 참조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의 요인들을 고민해 보았다.

43) 최원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경남 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 과정과 투자 사례』, 『한국 민족 문화』 14, 1999.

44) 藤永壯, 『植民地下日本人漁業資本家の存在形態李坨家漁場をめぐる朝鮮人漁民との葛藤』,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45) 1907년 6월 하순 종래의 한인 인부조합 永信社와 신규로 官許를 얻어 설립한 勞動會社와의 경쟁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 파업에 까지 이른 것이다(부산상공회의소홍보부, 『부산경제사료집』 6, 65쪽).

## 1. 재조일본인

조선자치론을 주장한 스에히로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열등민족으로 대우하는 태도를 논하고 그것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의 태도를 볼 때, 백인에게 대하여 인종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다고까지 하였다.<sup>46)</sup>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으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불필요한 민족차별 행동이 조선인들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요미우리신문의 재조일본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와 통한다.

반면 헌정회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졌다. 일본이 재조일본인을 푸대접(冷遇)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 이유는 이들이 일본이 조선에 베풀고 있는 ‘인정(仁政)’과 ‘애무(愛撫)’를 적극 조선인들에게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우리 측 시각으로 본다면 ‘제국의 침병’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재조일본인이라는 존재는 3·1운동이 일어난 사회·경제 배경의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과 일본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런데 일본인이 제일 먼저 들어온 부산은 3·1운동 직전 2만8,000명이 살고 있었다. 조선인이 3만2,000명이었으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sup>47)</sup> 그나마도 이것은 일본인이

46) 『동아일보』1920.4.2.

47) 1916년 부산부의 인구통계로 정확하게는 조선인 32,846명, 일본인 28,012명, 기타 외국인 187명이었다. 일본인의 비중은 전체의 46%였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1권, 1989, 1002쪽). 물론 조선인의 전통적 거주지인 동래부를 포함하면 조선인 비율이 높다. 1919년 시점에서 동래부에는 8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26, 2005, 300쪽).

그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 면에서 줄어든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부제(府制)’ 시행 첫 해인 1914년에는 거주 일본인 비율이 51.2%로 조선인보다 더 많이 살았다.<sup>48)</sup> 표 5는 1910년대 부산부에 거주한 민족별 인구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1914년 현재 부산부 거주 일본인은 2만8천 명, 조선인 2만 6천 명이었다. 따라서 민족 차별의 불씨인 재조일 본인이라는 요소가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으로 가지는 비중은 전국 어떤 지역보다 컸다고 할 것이다.

표 5. 1910년대 부산부 민족별 인구 추이(단위: 명)

연도	조선인		일본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14	6,098	26,653	7,115	28,254	13,259	55,094
1915	7,014	30,688	7,369	29,890	14,439	60,804
1916	7,395	32,846	7,110	28,012	14,554	61,047
1917	7,556	33,578	7,177	27,726	14,780	61,506
1918	8,072	35,463	6,993	27,895	15,122	63,567
1919	9,478	43,424	7,575	30,499	17,103	74,138
1920	9,551	40,532	7,689	33,085	17,294	73,855

자료: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26, 2005, 300쪽에서 재작성

그리고 이런 징후는 이미 3·1운동 전부터 보였다. 우선 1915년 일본인 습격사건을 들 수 있다. 변상태(卞相泰), 윤봉구(尹鳳求) 등이 주도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대신동에서 조선인을 괴롭히던 일본인의 집을 습격·방화한 것이다. 1916년에는 전차 사고를 계기로 수천명의 시위가 발생했다. 전차 교통사고로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오랫동안 참아오던 일본인들의 악행과 횡포에 대한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여 박일덕(朴日

48) 박영구, 『근대 부산의 제조업 1900~1944: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센터, 2005, 381쪽.

德), 박덕균(朴德均) 등 수백명이 전차를 전복, 투석으로 파괴하였고, 이후 시위가 확산되어 수 천 명이 경부철도를 차단하여 기차통행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서울 공진회(共進會) 개최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발 특별열차를 타기로 되어 있던 일본 왕족이 갈 수 없게 되었다. 급히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 1개 소대가 발포하여 겨우 군중을 해산하고 열차운행을 정상화하였다. 이 사건의 주동 인물로 무려 47명이 소요죄와 왕래방해죄로 검거되었다.<sup>49)</sup> 3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2월 첫 재판에서 전부 소요와 교통방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sup>50)</sup>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17년 12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sup>51)</sup>

사실 3·1운동 당시에는 부산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 표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록의 한계일 수 있고, 운동의 1차적 목적이 평화적으로 우리의 독립 열망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세운동에 대한 동참의 계기로 그간 축적되어 온 일본인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특별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은 앞선 선례들을 봤을 때 크게 논리적 비약은 아닐 것이다.

## 2. 상공업 성장과 민족기업가, 노동자

부산은 일제에 의해 가장 먼저 개항된 곳이자 대륙진출 거점이었으므로, 매축을 통해 항만이 확장, 정비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왜관이 있던 자리는 근대도시의 면모를 빠르게 갖춰나갔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일제와 일본인이 주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열매도 그들이 거의 독점했지만, 여기에 비례하여 그들에게 저항하고 독립을 희망하는 조선인 민족 부르주아지도 키웠다.

4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01쪽.

50) 『부산일보』 1916.12.26.

51) 『부산일보』 1917.12.20.

부산을 거점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안희제와 그가 설립한 백산상회는 전국적으로도 버금가는 사례가 드문 존재이다. 의령사람인 안희제는 일제에게 공전의 전쟁특수를 가져다 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논밭을 판 자금을 가지고 부산에 왔고, 백산상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특수를 맞았으며, 이 상회는 여기에 힘입어 1917년 자본금 13만 엔의 합자회사, 3·1운동이 일어난 해이자 전쟁특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이기도 한 1919년 자본금 100만 엔의 주식회사(백산무역)로 성장하였다. 백산상회의 기업 활동에는 구포의 윤현태(尹顯泰), 윤상은(尹相殷), 경주의 최준(崔浚) 등 조선인 대지주들도 참여하였다. 이들 역시 전쟁특수, 특히 미가 폭동의 수혜자들이다. 특히 최준은 백산무역 사장으로 선임되어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윤현태도 무역회사 일금상회(一金商會)를 경영했고, 1910년대 중반부터 이미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52)</sup>

잘 알려져 있듯이 백산무역은 일본인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 놀이터에서 전쟁특수에 편승한 기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였다. 독립자금은 윤상은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민족계 은행 경남은행을 통해서 상해로 송금되었다. 윤현태의 동생 윤현진(尹顯振)은 안희제와 대동청년당 활동을 하였고 백산상회에 참여하였으며 상해 임시정부 내무차장을 지냈다.<sup>53)</sup> 독립자금 조달운동에 가담한 어대성(魚大成) 역시 전쟁특수에 주목하여 미곡상으로 자본을 축적했다.<sup>54)</sup> 1919년 11월에는 백산상회를 중심으로 부산의 조선인 자산가들이 기미육영회를 설립, 청년세대 육성에도 나섰다.

52)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향토부산』 12, 1995, 81쪽.

53)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31쪽. 박원표, 『향토부산-부산의古今 시리즈 제3부』, 1967, 224쪽.

54) 부산상공회의소홍보부, 『부산경제사료집』 4, 27쪽.



이렇듯 일제가 자랑한 ‘식민지 근대’는 그들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는 기업가, 지주, 자산가를 성장시켰다. 토지조사사업 등 1910년대 일제 농정은 조선인 지주들에게도 화폐자본 축적의 기회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는 이들에게 무역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기업가로의 변신 기회를 제공했다. 물론 3·1운동의 독립 열기가 가라앉고, 문화통치의 분열 책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전쟁특수가 사라짐과 동시에 장기 불황의 시기가 닥친 1920대 이후 이들 민족상층부는 변함없는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투항과 변절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걷는다. 하지만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운동을 지도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이었고, 부산은 그런 전형적인 도시 공간 중 하나였다.<sup>55)</sup>

노동자 역시 같은 논리이다. 일제가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구축했던 항만시설을 통해 부두노동자가 성장했고, 그들이 매립한 땅위에 설립된 상공업 회사 공장들은 공장노동자들을 성장시켰다. 표 5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전쟁특수의 정점이기도 했던 1919년 부산의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만 명 이상 급증했다. 이들 중 8천 명은 조선인으로, 전쟁특수가 만든 일자리를 쫓아 부산으로 들어온 경남 등 인근 농촌 지역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일터에서 수탈과 차별을 경험했을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본인과의 임금차별 등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전쟁특수도 이들에게만은 실질적 혜택이 없었다. 실질임금이 높아지기는커녕 1910년대 초보다 하락했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전쟁특수로 인한 물가 상승이 명목임금의 상승을 상쇄한 것을 넘어서 실질임금을 줄였던 것이다. 커지는 빈부 격차와 폭등하는 쌀값은 식민통치에 대한 이들의 분노를 가중시켰을 것이다.

55) 191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기업가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연관에 대해서는 오미일, 앞의 논문 참조.

표 6은 1910년대 노동쟁의 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1916년도 동맹파업은 8건에 조선인 참가인원이 362명이었던 것이 1917년에는 8건에 1,128명으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1918년에는 50건, 4,44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1919년에는 84건 8,38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6. 1910년대 노동쟁의 상황 추이

연도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합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12	6	1,573			1,573	6			3	3	
1913	4	420		67	487	4			3	1	
1914	1	130			130	1			1		
1915	9	828	23	1,100	1,951	6	1	2	3	3	3
1916	8	362	8	88	458	7	1		6	2	
1917	8	1,128	20		1,148	6	1	1	4	1	3
1918	50	4,443	475	1,187	6,105	43	2	5	18	18	14
1919	84	8,383	401	327	9,111	76	4	4	12	35	37

자료: 강동진, 「1921년 9월의 부산부두노동자의 총파업에 관한 일고찰」, 『함도문화』 제3호, 1970, 부산향토문화연구회, 223쪽

부산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은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맹파업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확인되는 사례만을 정리해 보더라도, 1919년 4월 1일 부산와사전기 차장·운전수 600여명 파업, 20일 부산전차 운전수 50여명이 항일동맹파업을 단행하였고, 30일 부산와사전기 직공 61 명이 동맹파업하였다. 5월 16일에는 철도관리국 철도공장 초량분공장의 조선인 노동자 200여 명이 역시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였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은 3·1운동을 계기로 분출된 항일민족운동과 궤를 같이하며 1920년대 노동운동을 선도하였다.<sup>56)</sup> 1921년 5000

명의 대규모 파업인 부산부두운수노동자총파업은 식민지 조선에서 본격적 노동운동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자, 부산이 일제의 수탈과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자 도시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같은 해 800명의 영도 공장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졌고, 1922년 부산방직, 1923년 조선방직, 1925년 인쇄직공 파업 등으로 계속되었다. 모두 1920년대 전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사례들이었다.<sup>57)</sup>

## V. 맺음말

3·1운동이 한창이던 이른 시점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3·1운동이 발발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기존 식민통치의 문제, 민족차별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동을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배자의 인식에는 사회적 차별은 있었으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다이쇼데모크라시를 주도한 민본주의자들 조차도 스에히로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근대와 발전을 보고 있었다. 1919년의 시점에서 일본 사회는 제국주의자에서 민본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조선의 식민지 지배가 근대와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공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볼 때 문제가 된 것은 무단통치라고 불린 거칠고 서툰 통치기술과 조선인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지나친 차별이었다. 결국 이것은 문화통치로의 전환과 참정권 논의로 이어졌다.

반면 3·1운동으로 폭발한 조선 사회는 정치 폭력, 사회 차별에 더하여 경제 수탈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차별만을 바라보는

56) 강대민,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57)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13, 1020쪽.

식민지 지배자와 달리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의 ‘차별’과 ‘수탈’이라는 두 축은 운동이 진행되던 동 시기에 식민지 피지배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식이었다.

한편 이렇듯 부산을 포함한 전국 차원의 공통적 배경 요인 외에, 부산만이 갖는 3·1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도 고민해 보았다. 결론은 압도적 규모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공간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주도성,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지역 보다 앞서는 식민지 근대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전자는 민족 차별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에 대한 조선인의 분노와 저항도 한층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자는 일제에 저항하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성장시켰다. 백산상회의 기업 활동과 3·1운동기에 이미 활발했던 노동자의 항일동맹파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1920년대, 3·1운동의 전체적 열기는 식였으나, 부산은 일제의 차별과 수탈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의 열기로 여전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다.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大阪毎日新聞』 『大阪新報』 『読売新聞』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강대민,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권대웅, 「경주 부호 崔浚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2013.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26, 2005.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역사』 29, 2011.

- 박 섭,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한국경제-기업설립 붐, 생활수준, 산업정책』, 『현대사광장』 3, 2014.
- 박영구, 『근대 부산의 제조업 1900~1944: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센터, 2005.
- 박원표, 『항도부산-부산의古今 시리즈 제3부』, 1967.
- 박철규,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항도부산』 23, 2007.
- 배석만, 『3.1운동 경제배경 서술의 변화과정 분석』, 『역사와 현실』 108, 2018.
- \_\_\_\_\_, 『일제시기 입전(立廛)상인 백씨 집안의 경제활동-대창무역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과정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3-3, 2016.
- 부산상공회의소홍보부, 『부산경제사료집』 4.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권, 1989.
-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항도부산』 12, 1995.
- \_\_\_\_\_,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 이동언, 『안희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3.
- 주익중, 『대군의 척후: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역사, 2008.
- 지수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 최상원, 한혜경, 『일제강점기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에 걸친 기자 장덕준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30, 2012.
- 최원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경남 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 과정과 투자 사례』, 『한국 민족 문화』 14, 1999.
- 橋本寿郎, 『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学出版会, 1984.
- 大石嘉一郎 編, 『日本帝国主義史』 2, 東京大学出版会, 1985.
- 藤永壯, 『植民地下日本人漁業資本家の存在形態李垞家漁場をめぐる朝鮮人漁民との葛藤』,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武田晴人, 『景気循環と経済政策』, 『日本経済史』 3(石井寛治·原朗·武田晴人 編), 東京大学出版会, 2002.

小林英夫, 『朝鮮社会令研究-その実施状況を中心に-』, 『駒沢大学経済学論集』 第21卷 第3号, 1990.

\_\_\_\_\_, 『社会令研究ノート』, 『海峡』 第3, 1975.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8권, 2009(독립기념관홈페이지 : <http://www.i815.or.kr/kr/>).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확정일 : 2018. 12. 14.
---

| Abstract |

##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March 1st movement -Contemporary Analyses of it and Regionality of Busan

Bae, Suk-Man

This paper examines contemporary analyses on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March 1st movement and regional background factors specific to Busan. In the midst of March 1st movement, both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raised problems related with the existing colonial rule and national discrimination, as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March 1st movement. Although the governing who should monitor the movement and establish policies for it recognized social discrimination, they rarely recognized economic plundering. Even democrats who initiated Taisho Democracy focused on modernity and development in terms of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Joseon society awakened by March 1st movement strongly recognized economic plundering, in addition to political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Different from the governing who only perceived the discrimination in the colonial period, two axes of 'discrimination' and 'plundering' as socio-economic background of March 1st movement were already recognized by the governed, in the same period, when the movement was under way.

Busan was characterized by the urban space in which an overwhelming number of the Japanese resided, socio-economic autonomy, colonial modernity superior to that of any other areas, which was promoted them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former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strength of national discriminatio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other

areas, so Koreans' anger and resistance against it might be stronger. The latter fostered entrepreneurs and labours, who resisted to Japanese imperialism, more rapidly and largely, relative to those in other areas. This is supported by business activities of Baeksan Trading Company and alliance strikes against Japan, which were already actively implemented in the period of March 1st movement.

**Key words:** March 1st movement,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plundering, modernity, Busan